




정의로운 전환 충남도민 회의

Voices for Just Transition in Chungnam

제1차 워크숍 자료집

일 시 : 2023. 6. 2(금) 14:00 ~ 17:00

장 소 : 내포혁신플랫폼 M1 회의실

이 사업은 인권재단사람의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인권재단사람

정의로운 전환 운동의 과제 **충남**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화석연료나 핵이 아닌
공공성을 갖춘 재생에너지로,
취업 알선이 아닌 일자리 보장으로,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변화로,
기후위기 대응 전환은 반드시
'정의로운 전환'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정의로운 전환'이
될 수 있을까요?
인권과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길을 여는 워크샵에 초대합니다.

workshop for
just transition

일시 2023. 6. 2(금)
14:00 ~ 17:00

장소 내포혁신플랫폼
(M1 회의실)

발제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한재각(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

탈석탄과 노동자 일자리

이태성(발전비정규직전체대표자회의 간사)

정의로운 전환, 법제와 정책 현황

여형범(충남연구원)

정의로운전환충남도민회의(준) 활동계획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활

지정
토론 이정호(민주노동세종충남본부), 배형택(전농충남도연맹)
신지연(전여농충남연합회), 조순형(충남환경운동연합)
유미경(정의당 충남도당)

주최·주관 정의로운전환충남도민회의(준)

이 사업은 인권재단 사람이 지원합니다. ○△△음 인권재단사람

개요

- 목 적 :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연대와 협력 모색
 ‘정의로운 전환 충남도민회의(준)’ 활동 제안
- 주 제 : 충남 정의로운 전환 운동의 과제

진행 계획

시간		주요내용	비고
13:30~14:10	30'	등록과 인사	
14:10~15:10	20'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
	20'	탈석탄과 노동자 일자리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전체대표자회의 간사)
	10'	정의로운 전환, 법제와 정책 현황	여형범 (충남연구원)
	10'	정의로운전환충남도민회의(준) 활동방향	이진숙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틀)
15:10~15:20	10'	휴식	
15:20~16:00	40'	지정 토론	이정호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 정책국장) 배형택 (전농충남도연맹 정책위원장) 신지연 (전여농충남연합회 사무처장) 조순형 (충남환경연 기후에너지특위장) 유미경 (정의당충남도당 사무처장)
16:00~17:00	60'	전체 토론과 마무리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생태적 공공성을 향한 제안¹⁾

한재각(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

1. 사회공공성과 생태적 한계의 만남

- 에너지, 교통, 주거, 의료, 돌봄 등의 시민들의 생존과 존엄한 삶을 위해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기업과 자본의 이윤 추구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민영화/사유화 시도에 맞서 공공이 소유하고 운영관리하여 누구든 접근가능한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사회공공성’ 논리이자 운동이었다. 사회공공성을 방어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주장해온 진보정치의 핵심적인 요구이었다.
-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기후생태위기에 직면하면서, 사회공공성을 ‘생태적 한계’와 연결시켜 함께 논의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왜 그럴까? 첫째, 상대적으로 평온했던 기후/기상의 조건이 바뀌어 사회(혹은 문명)의 근본적 기반이 흔들리면서, 사회가 사람들의 생존과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재화와 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워지고 있다(우선, 물과 식량 그리고 수해/산불 재난으로부터의 안전 보장을 생각해보라). 즉, 사회공공성의 자연적 기반이 생태적 한계를 넘어선 자본주의 체제로 근본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둘째, 현행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국가와 자본은 기후위기의 대응 방향을 ‘생태적 한계’ 앞에서 생산/소비 기계를 멈춰 세우기 보다는 기존의 사회공공성을 더욱 제약하고 파괴하는 쪽으로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에너지/교통 요금 인상 추진을 생각해보라).
- 지금까지 사회공공성과 생태적 한계를 함께 묶어서 질문하고 답하려는 노력들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본격적인 사회적 토론과 정치적 실천은 그리 많지 않았다. 사회 불평등의 해결을 요구하는 사회운동과 진보정치에게도 여전히 낯선 질문이지만, 생태적 한계의 준수를 주장해온 환경운동과 녹색정치에게도 그리 익숙한 질문은 아니다.
- 지금까지의 사회적 공공성 담론은 생태적 한계를 무시/부정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자신의 관할 범위 안에 받아들이지 않고 멀리 거리를 두어 왔다. 대신 “많은 것은 좋은 것”이라는 기본적인 전제 하에 그것을 어떻게 잘 나눌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왔다. 그러나 기후위기는 그 기본 전제를 의심하고 비판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제 질문은 생태적 한계 내에서 사회적 부를 어떻게 잘 나눌 것인가로 바뀌어야 하는 순간이 왔다.
- 한편 생태적 한계를 강조하는 환경운동과 녹색정치에는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해결의 긴박성을 앞세우면서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는 후순위의 과제로서 간주하는 경향도 존재한다. “기후가 무너지면 평등이든 무엇이든 다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기후정의운동은 달리 생각한다.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은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따로 나눌 수 없으며 그 해결도 동시에 추구될 수 밖에 없다. 기후위기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주장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이 기후위기를 심화시킨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1) 이 자료는 녹색당 총선준비 2차 토론회(2023. 5. 20, 서울 철도회관)의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이 토론회에서 나왔던 토론 내용의 일부를 반영하였다.

2. 기후정의운동의 인식: 기후위기의 원인과 생태적 공공성

- 기후정의운동은 더이상 기후위기 인식과 대응 여부를 두고 사회적 논쟁을 벌이는데 집중할 이유가 없다. 정부와 기업이 여전히 기후위기를 주요한 사회 의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다는 분석은 가능하지만, 그런 상황은 '인식 부족'으로 설명되기보다는 (의식적이든 비의식적이든) 그들의 전략적 판단의 결과로 이해되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이 기후위기를 주요한 사회 의제로 다루지 않은 것은 자신들의 정치, 사회, 경제적 이해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그들이 이에 관심을 가진다면, 자신들의 이해와 조화될 방법을 찾기 위해서다. 정부와 기업이 어떤 이해 계산 속에서 기후위기를 공론장에서, 정책에서, 그리고 예산에서 밀어내고 있는지, 혹은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밝히고 맞서는 것이 필요한 일이다.
- 오히려 기후정의운동은 기후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묻기는 원한다. 그리고 기후위기의 원인을 자연과 인간을 대적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자본과 대적시키는 방식으로 이해하려 한다. 즉, 기후위기를 인류가 보다 편리하고 풍족한 삶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부작용으로 설명하기 보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자본의 무한한 이윤 생산과 자본 축적을 추구한 결과로 설명한다. 그럼으로서 기후위기를 개별 기업과 정부가 저지고 있는 일탈과 악행의 문제로 간주하기 보다는 자본주의 성장체제라는 구조적 원인을 주목할 수 있다. 또한 이 위기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해내고, 이 위기를 해결한 주체가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토론할 수 있다.
- 이런 인식 아래에 기후위기 시대의 공공성, 즉 생태적 공공성을 논의할 수 있다. 생태적 공공성은 온실가스 배출 책임은 적으나 기후위기(와 해결책)로부터 생존과 존엄한 삶을 위협받고 있는 대다수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상호 연대하기 위한 공적/사회적 노력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얻고 낭비적 소비를 해온 소수의 가해자들(기업/자본과 부유층)에게 책임을 물어 그들의 배출을 과감히 줄이고 사회 전체의 탈탄소 전환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요구가 필요적으로 덧붙여질 수 밖에 없다.
- 이러한 생태적 공공성 논의에 비춰 봤을 때, 지금까지의 공공성 논의는 두가지 한계가 있었다. (1)공공재를 정의하고 다루는데 나타나는 주류 경제학적 편향이다. 공공성 논의가 주류 경제학의 프레임 안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내적 속성(비배제성과 비경합성)으로만 공공재를 좁게 정의하는 일이 잦았다. 그 결과 나머지 대부분을 국가가 아닌 시장이 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시장재)로 규정하게 된다. 그러나 무엇이 공공재인가에 대한 결정은 내적 속성만이 아니라 사회적 필요와 그를 둘러싼 사회적 권력 관계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재)구성되는 것이다(학교 급식을 생각해보라). (2)공공재의 생산과 공급의 생태적 파괴 가능성을 무시하고 지구적 남반구(혹은 국내 식민지)의 착취와 수탈의 결과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경계와 비판이 부족했다(공기업에 의한 핵발전, 석탄발전, 초고압 송전탑 건설 등을 생각해보라). 이러한 반생태적이며 수탈적 공공성은 개발주의/저항적 민족주의 시대에 큰 문제없이 정당화되었지만 더이상은 불가능하다. 생태적 공공성은 이런 편향에서 벗어나야 한다.
- 공공 부문을 단순히 옹호하고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역할과 범위에 대해서도 토론이 필요하다. 과거 국가는 주로 경제성장을 위해서 기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기반시설을 직접 건설/소유하고 전력과 가스 등을 공급해왔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흐름에 따라서 국가는 기반시설을 민영화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새로운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를 유도/촉진하고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변화를 통해서 국가는 탈탄소전환의 인도자(마중물)이자 자유화된 시장의 공정한 규제/관리자로 자신의 역할을 제한하면서, 기반시설의 소유/운영자이자 공공재의 공급자로서의 역할에서 물러났다. 반대로 국가가 직접 나서 투자하고 기반 시설을 소유/운영하여 탈탄소전환을 빠르게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필수적 재화와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생태적 공공성에서도 공공재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공적으로 소유하여 운영하며 그것을 통해서 공공재를 탈상품화하는 과정이 우회할 수 없는 핵심적인 사항이다.

- 그러나 국가 그리고 공공 부문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높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개발주의 시대의 비민주적이고 경직된 관료제의 병폐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시장주의 역행을 정당화하였고, 그 결과 공공성이 약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시장의 이해에 앞장서는 것으로 여겨지는 공공 부문의 사회적 신뢰는 더욱 낮아지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 따라서 공공 부문의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고 그 역량을 강화하는 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주적 개혁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성을 보장할 주체로서 국가만을 자동으로 상정할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 그리고 시민사회의 역할을 폭넓게 인정하고 그들사이의 협력과 견제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

3. 공공적 에너지전환의 모색 필요성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시스템을 재생에너지 기반의 탈탄소 에너지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에너지전환’은 이미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다.²⁾ 문제는 전환의 속도와 경로에 있다.
- 에너지전환과 관련된 한국 사회의 지배적인 논쟁 구도는 재생에너지 확대의 속도(그리고 석탄발전소/핵발전소의 폐쇄 속도)에 맞춰져 있다. 이에 비해서 전력을 포함한 에너지 소비 전체를 감축하는 문제는 주변화되어 있다.
 - 문재인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추진되어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늘고 있지만, 한국의 전력 시스템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10%를 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NDC를 강화하면서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30.2%로 확대했지만, 보다 야심찬 감축목표를 세우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충분치 못한 재생에너지 목표라고 평가받았다.
 -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탈핵 정책’을 뒤집어 핵발전 비중을 확대하면서 석탄/LNG 발전은 그대로 둔 채 대신 재생에너지 발전을 21.6%로 낮추어서,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전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한편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노후) 석탄발전소의 폐쇄를 가속화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정부/기업의 신규 석탄발전소 나아가 신규 LNG 발전소의 건설 계획이 국가적으로 천명된 ‘탄소중립’ 비전 그리고 사회적 공공성 요구와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쟁도 시작되고 있다(국민연금의 석탄투자 철회 요구와 발전공기업의 약화 가능성, 신규 LNG 발전소 건설 반대와 석탄발전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 어려움 등).
- 그러나 무엇보다도 에너지전환은 누구에 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가라는 ‘경로’를 두고 벌어지는 논쟁에 주목해야 한다.
 - 우선 2000년대 초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통해서 발전시장이 자유화된 결과에 주목해야 한다. 현재 발전용량 기준으로 30~40%, 발전량 기준으로 20%가 민간발전사가 차지하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에너지 민영화’에 반대 주장에 동의하고 있지만, 발전 부문에서부터 전력산업의 민영화는 계속 진행중이다. 이 민영화에는 공기업인 한전 발전자회사들의 경상정비, 연료환경 부문의 업무들이 외주화되어 민간업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포함된다.
 - 발전 부문의 민영화는 주로 신규 건설된 LNG 발전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최근에는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성하이, 강릉안인, 삼척 블루파워). 게다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대부분(90%)이 민간발전사에 의해서 소유하고 있으며(표 1 참조)³⁾, 울산, 추자도, 인천, 부산 앞바다 등에서 구상/계획되고 있는 대규모 해

2) 물론 ‘에너지전환’을 에너지원의 변화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충분치 않다. 에너지전환은 에너지원의 변화, 에너지 이용의 의미 변화(수요 감축), 에너지 생산과 소비 공간의 불일치 교정, 에너지 생산/공급 사업의 소유와 운영의 변화, 에너지 시민성의 변화 등을 포함한 다차원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3) 공기업(6개 한전 발전자회사)가 소유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은 모두 겨우 1GW로서, 전력거래소를 통해서 전력도매

상풍력단지들에 대한 해외 기업과 자본의 개발과 투자가 예정되어 있어⁴⁾ 재생에너지의 민영화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여기에 더해 최근 들어 민간발전사의 SMR 핵발전 건설과 송전 부문의 민영화 계획까지 거론되고 있다.

- 이런 상황들을 고려하면, 기존 에너지시스템의 변화가 시장적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으며, 공공적 경로 모색의 필요성을 드러내준다.

표1. 발전공기업들의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현황

구분	발전용량 (MW)	A 내 비중 (%)	B 내 비중 (%)	C 내 비중 (%)
전체 발전설비(A)	129,191	100.0	-	-
신재생E 발전설비	20,545	15.9	-	-
시장참여 재생E 발전설비(B)	10,739	8.3	-	-
공기업 발전설비(C)	85,220	66.0	-	-
공기업 재생E 발전설비	1,009	0.8	9.4	1.2

* 자료: 전력통계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가공

- 점차 진행되고 있는 발전(그리고 천연가스) 부문 민영화의 문제점들이 이미 드러나고 있다. 우선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시민들과 국가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며 자신들은 횡재이익을 누리고 있다.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뚜렷하게 나타난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의 국제 가격의 폭등 결과로 시민들의 전기/가스 요금도 크게 인상되고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와 미수금액도 급격히 증가하는 와중에도, 민간발전사들은 2022년에 2조 3천원 이상의 초과이익을 챙겼다.⁵⁾ 민간발전사에 유리한 전력 도매 가격(SMP) 제도의 문제 그리고 가스직도입을 허락받은 민간발전사의 기회주의적 행태의 영향으로 인해서 벌어진 상반된 결과였다.
 - 정부는 SMP 상한제를 통해서 초과이익 발생을 일부 억눌러 한전 적자가 더욱 늘어나는 것을 막아섰지만, 민간발전사의 반발로 SMP 상한제도 한시적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었다(아쉽게도 여기에는 에너지협동조합 진영도 동조했다). 발전 시장에서 비중이 커진 민간발전사들이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주요한 행위자로 등장하여 영향력을 점차 확대한 결과인데, 이는 향후 에너지전환의 속도와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게다가 민간발전사들의 화석연료 발전소에 대한 투자/소유로 인한 '좌초자산'의 증대, 그리고 이윤 우선의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따른 사회적 저항 증가로 인해서 빠른 전환에도 장애물이 되고 있다.
 - 문재인 정부에서 보여주었듯이 공기업인 발전자회사의 핵발전소와 석탄발전소의 폐지는 정부 의지를 통해서 추진할 수 있지만, 삼척 블루파워와 같은 민간발전사의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결정은 법적/정치적 장애물에 직면하게 된다. 현재 삼척 블루파워 건설을 중단하기 위한 국민입법청원이 이루어졌고 이어서 관련 법안 발의가 준비중에 있지만 성

시장에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의 9.4%에 불과하다. 나머지의 대부분은 민간 기업에 의해서 소유운영되고 있다(여기에는 발전공기업들이 지분 투자를 위한 SPC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의 태양광 발전설비도 포함되었지만 비중은 대단히 미비하다.

- 4) 대규모 해상 풍력 단지 개발 사업에는 해외 기업들(에퀴노 사우스코리아/울산+ 추자도, 오스테르/인천 등)과 맥쿼리(GIG 코리아)나 블랙록(이지스PE) 같은 금융자본이 진출하기 시작했다.
- 5) "SK, GS, 포스코 등 3대 천연가스 직수입 민자발전사의 2022년 영업이익 합계는 약 2조 3천억 원으로 2020년의 약 6천억 원 대비 4배 정도 증가했다. 특히 SK E&S의 영업이익은 2020년 2,412억 원에서 2022년 1조 4,191억 원으로 6배 꺾어 올랐다"(기후정의동맹,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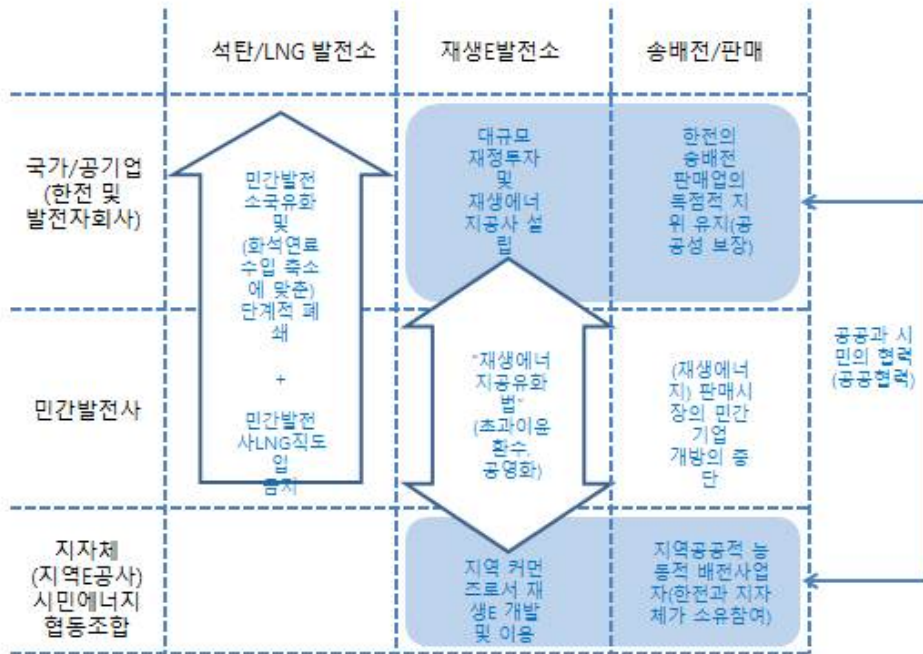
공 여부는 불투명하다. 게다가 민간 발전소의 건설 중단을 위해서는 투자 비용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민간발전사들은 이 사업이 시행되었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미래의 수익'까지도 보상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 한편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민간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전국 각지에서 환경 파괴, 인권 침해, 민주주의 훼손 등에 따른 주민들의 저항에 직면하면서 재생에너지 이용의 빠른 확대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 에너지전환의 시장적 경로를 수정하여 공공적 경로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는 이상의 상황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즉, 기업/자본들의 공공재의 생산과 공급에 참여하여 사회적 부를 '횡령'하는 것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필수적 에너지 이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공적 경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에 국한되지 않고, 에너지전환을 보다 빠르게 그리고 정의롭게 추진하기 위해서도 공공적 경로는 필수적이다.

4.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의 정책 방향 제안: 생태적 공공성 노선을 강화하자

- 재생에너지에 대한 대규모 공적 투자와 공공 소유에 기반한 이익 공유
 - 정부가 대규모 재정을 투자하고 공공 부문을 통해서 진행하여 재생에너지 이용을 빠르게 확대해가야 한다. 이는 재생에너지 사업의 공적/사회적 소유를 통해서 '자연의 선물'인 재생에너지 이용의 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또한 기존에 재생에너지 민간발전사들이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는 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얻어진 이윤의 일부를 사회로 환원하도록 하는 조치도 포함된다.
 - 국가 수준의 에너지공기업 뿐만 아니라, 지역 수준의 지역에너지공사 및 지역 시민 참여 기반의 협동조합 등이 '확장된 공공 부문'을 형성해서, 공공적, 민주적 에너지전환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한다. 그리고 국가공기업, 지역공기업들, 그리고 시민 참여 기반의 협동조합 등, '확장된 공공 부문' 사이의 '공공협력'을 추진한다.
 - 이러한 제안은 제주도의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관련 제도(풍력단지지구 지정, 제주에너지공사에 의한 공적 개발, 풍력공유화 기금의 설치운영 등)의 선진적 경험을 전국화하는 것인 동시에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노력을 의미한다. 특히 제주에너지공사의 부족한 역량(기술, 경영,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 사이의 '공공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석탄발전 노동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재생에너지공사'로의 고용 보장 등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기도 하다. 발전공기업들이 정부의 재정 투자와 지원을 받아 기술과 경영 역량을 직접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사업을 진행/확대하고, 폐쇄될 석탄발전 부문의 노동자가 교육훈련에 참가한 후 재생에너지 부문으로 옮기는 것을 보장하여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림 1. 에너지전환의 공공적 경로. (한재각, 2022)



- 화석연료 기반의 민간발전사들의 재공영화와 단계적인 폐쇄와 정의로운 전환 추진
 - “굴뚝에서 유정으로!” 이 슬로건은 온실가스의 급격한 감축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의 규제/감축에 매달리는 접근에서 벗어나서 화석연료 채굴/공급의 규제/감축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함축한다.
 - 석유연료를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그 수입의 통제 및 단계적 축소(궁극적으로 제로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에 할당될 수 있는 탄소예산에 근거하여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강화하고, 이에 기반하여 매년 수입가능한 화석연료량을 정하고 그 안에서만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제해야 한다.
 - 문제는 화석연료 수입 통제와 축소의 방법이다, 석탄과 천연가스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발전공기업과 가스공사는 정부의 계획으로 통제할 수 있지만, 민간 소유의 에너지기업(주로 민간발전사와 정유사)을 통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를 민간 기업에게 강제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이 있어야 하는데, 법 제정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공하더라도 이들 기업들은 사적 소유로 두었을 때는 끊임없이 저항하게 될 것이다.
 - 따라서 민간발전사들(나아가 정유사 포함)의 석탄/LNG 발전소를 국유화/공영화하여 공공적 통제와 관리(LNG 직도 입 중단 포함)하에 두면서, 단계적으로 조기 폐쇄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 한편 단계적으로 축소/폐지될 (민간발전사의 노동자를 포함하여) 석탄/LNG 발전소의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을 위해서, 국가는 국유/공유화된 발전기업들에게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감독할 수 있다.
- 시민들의 필수적 에너지 이용의 탈상품화 및 기업들의 에너지 요금 특혜 취소⁶⁾

6) 이에 관련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별첨하는 <문화과학> 게재 예정인 원고를 참고할 것.

- 기후위기 심화로 혹독해진 추위와 더위 등은 시민들의 생존과 존엄한 삶을 위한 에너지 기본권의 보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값싸게 채굴 가능한 연료의 고갈, 화석연료의 국제 가격 불안정, 가격에 배출 비용을 반영하려는 시도 등으로 에너지 요금의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위태로운 에너지 기본권이 더욱 위협받고 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국제 에너지 가격의 폭등과 이어진 국내 에너지 요금의 급등으로 생존과 존엄을 위협받고 있는 이들의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다.
- 정부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 정책은 에너지 공기업들의 요금 할인과 정부의 보조금(에너지 바우처) 지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많고 보장 범위가 충분치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이재임, 2023). 이런 잔여적이고 선별적 방식에 넘어서 보편적인 방식으로 ‘탈상품화’ 전략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즉 모든 이들이 ‘시민들의 필수적인 에너지’ 이용을 ‘지불가능한 수준’의 요금(무상 공급까지 포함)으로 공급하는 전략이다.
 - 예를 들어 전기의 경우, 가정용 요금 누진제를 활용하여 사용량 중위 가구의 전력량 이하는 원가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상의 전력량은 원가 이상으로 (과다 사용 가구의 경우에는 징벌적으로) 요금을 부여하는 방식을 강화해야 한다. 가스와 열 등에 대해서 비슷한 접근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 반면 대부분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들의 요금은 충분히 인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부하 요금제 등으로 기업에게 주고 있는 특혜의 폐지를 포함한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발생한 것과 같은 민간발전사들의 초과이익도 환수하는 것도 중요하다.⁷⁾ 근본적으로 민간발전사의 재공영화와 천연가스 직도입 제도의 폐지도 필요하다.
- 주거와 교통의 공공성 강화: 대규모 ‘그린 리모델링’ 투자와 버스의 완전 공영제
 - 작년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한 반지하 거주민들의 사망 사건은 “기후위기 시대(에) 열악한 주거는 그 자체가 재난의 조건”이며, “적정주거에 대한 요구와 실현은 더이상 미뤄서는 안 될 시급한 과제”임을 보여주었다(이재임, 2023). 또한 공공 부문이 시민들에게 필수적 에너지를 ‘지불가능한 수준의 요금’으로 공급하더라도, 비정적 주거를 비롯하여 단열 성능이 낮은 건물들은 에너지 사용의 효과를 낮추기 때문에, 기후위기 대응의 차원에서 빠르게 개선하거나 대체할 필요성이 있다.
 - 이는 기존의 노후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면 철거, 대규모 토건개발식 공급이 아닌 기존 주택을 개보수해 공급하는’ 공공 매입임대주택의 확대, (서울의 경우, ‘용산 정비창’과 같은) 도심 내 공공부지를 활용한 성능 좋은 공공임대주택의 건설과 공급을 빠르게 확대하기 위해서 공공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 나아가 민간 주택과 건물에게도 건물 성능을 개선할 것을 의무화하고,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경우에 이를 지원하고 그 소유권(의 일부)을 공적으로 통제/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주로 개인 소유의 (내연기관을 장착한) 승용차와 도로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의 교통 부문은 온실가스의 중요한 배출원이자 심각한 불평등이 드러나는 곳이다. 이점을 극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이 최근 국제 유가 상승에 대응한 ‘유류세 인하’ 조치다. 교통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지속하도록 하는 한편 ‘소득 역진적 효과’로 인한 인하 효과의 불평등을 드러냈다.
 - 궤도와 버스 부문의 확대와 할인 정책권의 도입 등으로 공공 교통을 강화하여 자동차의 총주행거리를 단축하고, 이들의 동력을 탈탄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교통불평등을 해소하는데도 직접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철도 등의 궤도에 대한 공적 투자 확대, 버스 완전공영제 실시와 전기버스 등의 전환 등을 추진해야 한다.

7) 이를 통해서 줄일 수 있는 한전의 적자 규모는 다음과 같이 추진되고 있다. “민자발전 초과이익 통제 2조원, 경부하요금제 특혜 폐지 1.5조원, 대기업요금 인상 50%로 16조원의 적자 절감이 가능하다. 대기업에 대한 특혜 폐지와 민자발전 초과이익 통제로 약 20조의 비용을 절감했다면 작년 한전의 적자는 10조원 규모에 그쳤을 것이다”(구준모, 2023: 18).

• 정부의 확정적 재정 정책과 공기업들의 민주적 통제

- 정의로운 (주거, 교통 등으로 넓힌) 에너지전환을 위한 공공의 대규모 투자의 필요성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필요로 한다. 국가 채무를 엄격히 통제하려는 정부의 임의적인 '재정준칙'과 그것을 법제화는 탈탄소 전환에 필요한 국가 역할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 재정준칙을 확립하고 적용한다더라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대규모 공적 투자 등에는 제외할 필요가 있다.⁸⁾
- 한편 공공성보다는 경영효율성을 강조하며 공기업을 사실상 영리 추구 기업들처럼 만들고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들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관리 목적과 방향, 기능조정 방향, 내외부 지배구조, 평가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개혁해야 한다.⁹⁾

참고문헌

구준모(2023), “기후정의를 위한 에너지 공공성과 공공요금”, 414 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 주최, ‘기후위기 시대’ 공공요금 인상 어떻게 볼 것인가 쟁점 토론회(2023. 3. 9: 서울 청년문화공간 JU: 이하, 414 조직위 쟁점 토론회) 자료집, 5-24쪽.

김철·박용석·김경근(2022). 『공공기관운영법 15년, 공공기관 대전환 방향과 과제』. 사회공공연구원 연구보고서 2022-02. http://m.ppip.or.kr/index.php?mid=board_MRhQ99&page=1&document_srl=6038&m=0

한재각(2022), “기후정의동맹의 기후-에너지 정책 대안 모색”, <에너지·기후 정책 쟁점과 운동 과제- 정의로운 에너지 체제 전환 투쟁을 위하여> 기후정의동맹 워크숍(2022. 6. 9, 발전노조 회의실) 발표문: <https://www.climatejusticealliance.kr/23ff4eea-e723-498d-88ce-7ea2152dbe8a>

기후정의동맹(2023), “[성명] 잘못된 진단, 잘못된 처방: 윤석열 정부의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부쳐”, <https://www.climatejusticealliance.kr/e7b529f5-2ee7-4db7-8d93-6f15016afe62>

이재임(2023), “기후위기 시대 주거공공성 강화를 위해”, 녹색당 주최,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2024 총선 준비 2차 토론회(2023. 5. 20, 용산 철도회관) 토론문.

8) 경북대 나원준 교수의 다음의 제안을 참고할 것. “최근 경기 악화로 재정 준칙이 유명무실해지거나 꼭 필요한 정부 지출을 제한하는 결립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그는 “고정된 재정 적자 비율 기준에 얽매어 지출을 강제로 줄이면 경제에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재정 준칙을 원점에서 다시 설계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저출산·기후위기·불평등 극복 및 산업 전환 등을 위한 공공 투자는 준칙 적용을 제외하자는 게 나(원준) 교수의 제안이다”(한겨레, 2023. 3. 14: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83593.html)

9)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철 외(2022)를 참고.

발표(2)

탈석탄과 노동자 일자리: 발전소 노동자가 이야기하는 정의로운 전환

이태성(공공운수노조 발전 비정규직 전체 대표자회의 간사)

발전소 노동자가 이야기하는 정의로운 전환



공공운수노조 발전 비정규직 전체대표자회의 간사 이태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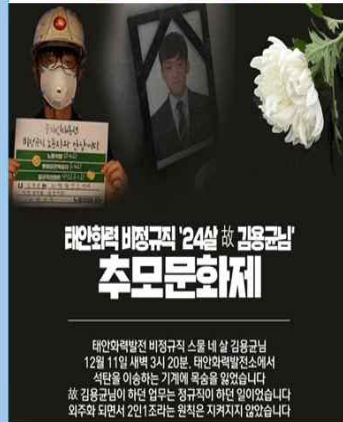


16년 시작된 위협의 외주화



18년 청년노동자 김용균 죽음

28년만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하지만 발전소 노동자는 삶은? 기후위기 속 하고!



우리가 직면한 문제



기후변화? 아니 기후재앙이다



기후위기에 행동하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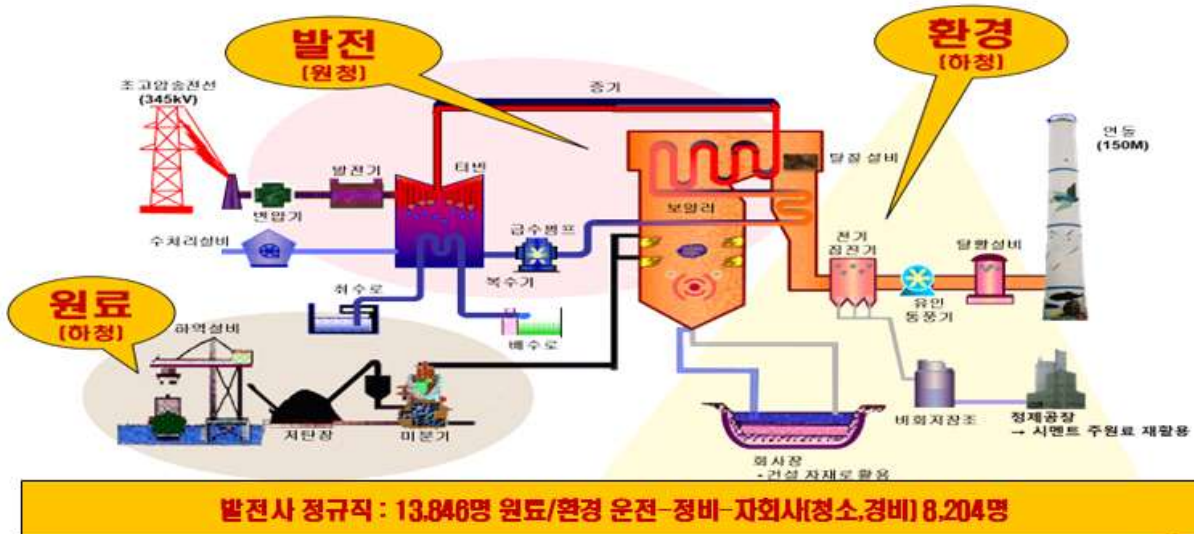
함께 만나 이야기 해야 합니다.



1. 발전소 폐쇄 정책과 전망



석탄화력발전소 계통도



10



취약한 고용구조 속에 발전소 민영화



11



폐쇄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이직, 전직 실태 현

황
기 폐지 석탄화력 13기 협력사 888명 중, 790명(88.9%) 재배치 완료, 73명 해고

연도	사업소	별전사		협력사	
		기존	■지 후	기존	■지 후
2017	서천 1.2	139명	전원 재배치	218명	197명 재배치 8명 정년 13명 해고
2017	영동 1.2	213명	전원 재배치	168명	148명 재배치 10명 해고
2020	보령 1.2	139명	전원 재배치	146명	124명 재배치 6명 정년 16명 해고
2020	삼천포 1.2	110명	전원 재배치	145명	137명 재배치 8명 정년
2021. 12	호남 1.2	전원 재배치		133명	118명 재배치 3명 정년 14명 해고
2022. 1	울산	전원 재배치		88명	68명 재배치 20명 정년
합계		601명	전원 재배치	888명	790명 재배치 25명 정년 73명 해고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에너지 정책 방향

윤석열 대통령 에너지 공약

탄소중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50년 탄소중립 공감 • 산업계 의견, 사회적 합의 필요
원자력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력 발전 비중 30% 유지 • 신한울 건설 재개
재생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력 발전 통한 탄소 중립 •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하지만 현실적 목표로



국민의힘

그래픽 박애수 > [자 hspark@newsway.co.kr

Newsway

임기중 화력(석탄+LNG) 발전 비중 40% 대로 감축
노동대책은 전무함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19.7% 대폭 감소

① 원전, ② 신재생 확대, ③ 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 도입, ④ 석탄발전 축소 등을 통해 전환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 '18년과 '30년 전원별 발전량 비중 비교 >

	원자력	석탄	LNG	신재생	수소 암모니아	기타	계
'18년	23.4%	41.9%	26.8%	6.2%	-	1.7%	100%
'30년	32.4%	19.7%	22.9%	21.6%	2.1%	1.3%	100%

* 태양광·풍력 출력제어 후 발전량 비중(출력제어 전 '30년 22.1%, '36년 33.0%)

□ (공급) 실현 가능하고 균형잡힌 전원믹스 구성

- 9차와 동일한 기준 설비예비율 22%('36년) → 신규설비 1.7GW 필요
- 발전원은 기술개발,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해 차기 계획에서 결정(제주 0.3GW 제외)

	'22년	'36년	비고
원전	24.7GW	31.7GW	· 원전 계속운전 및 신규원전 준공 반영
석탄	38.1GW	27.1GW	· 계획기간 중 노후석탄 28기 폐지
LNG	41.3GW	64.6GW	· 신규 LNG 및 노후석탄 LNG 전환 반영
신재생	29.2GW	108.3GW	· 사업자 계획조사 등 현실적 보급전망 반영

* 년도말, 정격용량 기준

- ① 원전 : 사업자 의향에 따른 운영허가 만료 설비의 계속운전 등 반영
- ② 신재생 : 계획조사 등에 기반하여 실현가능한 물량수준을 반영
- ③ 수소·암모니아(무탄소연료) 혼소발전 도입 : 연료도입, 기업 의향 반영
- ④ 석탄발전 축소 : 석탄 58기 중 노후 설비 20기 폐지 및 발전량 제약
- ⑤ 발전량 제약 : 원전·신재생 확대, 수소·암모니아 도입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추가 석탄발전량 제약을 통해 온실가스 목표 달성

○ 석탄은 가동정지, 상한계약(80%)를 적용하여 추가 감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달성할 계획



민영화 에너지 정책과 대기업 엄청난 영업

이러

민간이 이끌어가는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 4 과학기술 혁신과 규제개선을 통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가속화
- 5 핵심산업 육성을 통한 세계시장 선도 및 신시장 창출
- 6 탄소중립 친화적인 재정·금융 프로그램 구축·운영 및 투자 확대

3대 직수입 민자발전사 영업이익

	2020년	2021년	2022년	2년 증가율
SK E&S	2,412억	6,192억	1조4,191억	488%
GS EPS	1,164억	2,120억	6,087억	423%
포스코 에너지	2,410억	2,033억	2,711억	11%
합계	5,986억	1조345억	2조2,989억	284%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와 인구감소 심각

<표 6-73> 석탄화력발전 폐지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영향 분석(단위: 십억원)

지역	경제적 영향 1		경제적 영향 2	
	GRDP 규모 (2017)	생산유발 감소금액	GRDP 규모 (2017)	부가가치유발 감소금액
충청남도	110,165	19,208	110,165	7,830
경상남도	106,561	17,564	106,561	7,518
인천광역시	85,791	2,832	85,791	1,140
전라남도	71,340	2,331	71,340	1,076

출처: KOSIS

<표 6-74> 석탄화력발전 폐지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영향 분석(단위: 명)

지역	경활인구 (2019)	고용 영향	
		취업유발 감소인원	비중 (%)
충청남도	1,231,000	7,577	0.62%
경상남도	1,817,000	7,896	0.43%
인천광역시	1,653,000	1,543	0.09%
전라남도	999,000	631	0.06%



석탄화력발전소에서 LNG발전 전환의 허상

석탄 → LNG 전환 시

4,911명

기존인력의 61%

전환 불가

연료 및 기타설비 지원

협력업체	운탄	부두	청소·경비	경영지원 등
전환 불가	42명	37명	75명	
발전 본부	0명	37명	24명	

발전 본부 대부분 임

발전 자회사

2. 노조 공동요구 안, 입법 투쟁전개



22년 연구용역 석탄화력 폐쇄정책 동의 고용 최우

II. 조사결과 :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정책

■ 발전 비정규노동자 74.0%가 "고용이 보장된다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정책에 찬성"한다

- 기후위기 심각하다고 인식할수록 폐쇄정책 찬성
(집단간 차이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

<고용이 보장된다면 폐쇄정책 찬성>

- 기후위기 심각성 높은 집단 78.6%
- 기후위기 심각성 낮은 집단 60.5%

<고용이 보장되더라도 폐쇄정책 반대>

- 기후위기 심각성 높은 집단 13.5%
- 기후위기 심각성 낮은 집단 32.1%

[표] 기후위기 심각성과 폐쇄정책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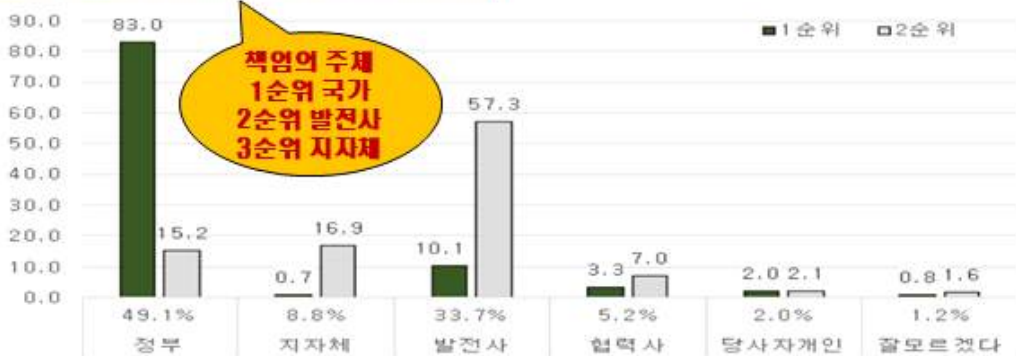


정부와 발전사, 지자체 국가정책의 주체로 대책마

II. 조사결과 : 우선적으로 책임져야 할 고용주체

■ 비정규노동자의 83%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할 경우, 우선적으로 국가가 고용보장의 책임 주체라고 인식

- (우선순위분석) 1순위 : 국가(83%), 2순위 : 발전사(5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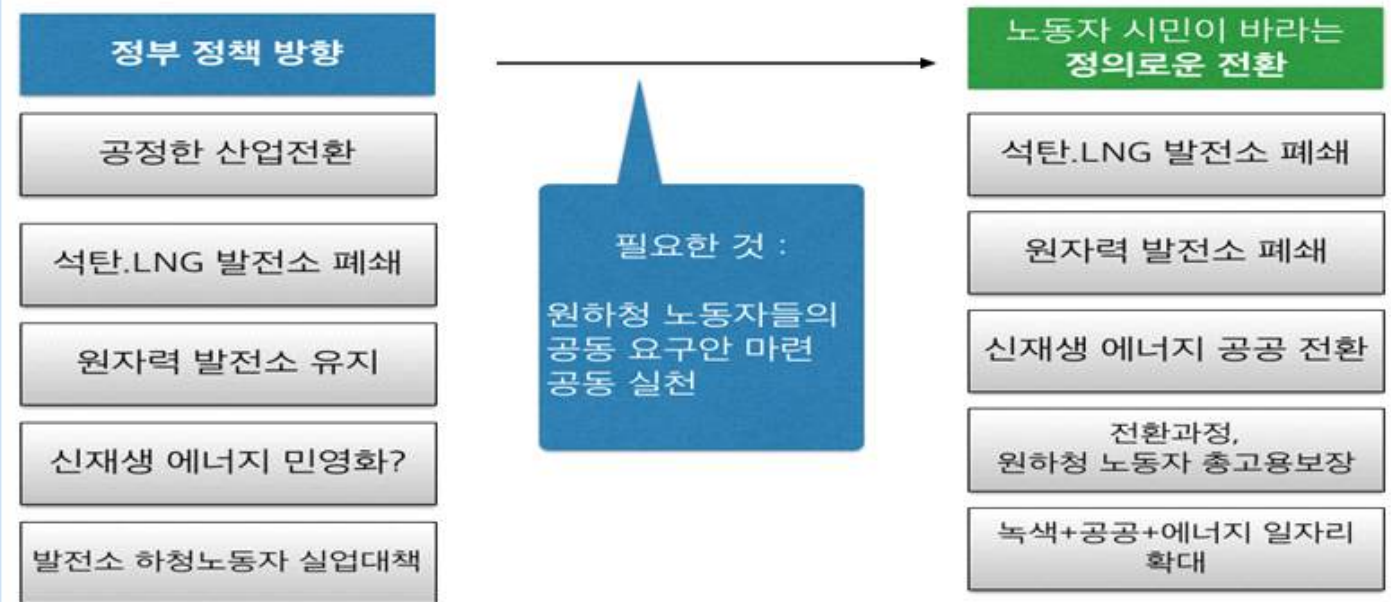


- 발전소 폐쇄가 탈석탄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이며, 국가 차원에서 총고용 보장 원칙 중요하다고 인식

공공이 미래다! : 공공성 강화와 재공영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대안적 방향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법(강은미의원) 제정 투



발전노동자라면 알아야하는

정의로운 전환법

핵심요약

공공운수노조

02.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고용안정 지원법?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법?

01 법 이름부터 다르다

일자리(국립)	이수환(민주)	강은미(정의)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정의로운
지원	지원	전환
에 관한 법	에 관한 법	에 관한 법

02 지원? 전환?

발전소 폐쇄로 어쩔 수 없이 **해고위기에 노동자를**
지원하는 시혜적 고용보장책이 아니라
 국가전환정책으로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결과**
양질의 일자리를 발전노동자에게 제공해야



노동자가 주체로 참여하는 일자리전환위원회

03.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경제성장이나? 노동자 일자리 보장이나?

01 법을 만드는 이유?

일자리(국립)	이수환(민주)	강은미(정의)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경제성장 이바지	경제성장 이바지	경제성장 이바지 등 사회경제적 주체 참여기반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실현

02 목적부터가 다르다!

경제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발전소 폐쇄와 에너지 전환이 아닌!

에너지전환에 따라 **발전노동자가 직접 참여하고**
논의하는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실현해야



04.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정부 마음대로 할 것일까? 발전노동자 참여할 것일까?

01 고용정책심의회? 일자리 전환위?

일자리(국립)	이수환(민주)	강은미(정의)
노동부 산하	노동부 산하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고용정책심의회	고용정책심의회	사회경제적 주체 참여기반
통제 결정	통제 결정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위 설치

02 발전노동자 참여 하는게 당연

고용정책심의회 : 고용노동부 산하 기구로 고용

노동부 장관이 주재하며, **노동자 참여보장 안됨**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 정부 산하 기구로 두며,
발전노동자 직접 참여를 통해 정부계획에 개입





산업/업종/지역별 위원회 구성필요(지자체)

05.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발전노동자와 지역에서부터 대화하라

01 산업별·업종별·지역별 위원회?

임이자(국회)	이수진(민주)	강은미(정의)
내용 없음	내용 없음	산업별·업종별·지역별 위원회 설치 및 노동자 참여보장

02 지역에서 발전노동자가 직접 대화

산업별·업종별·지역별 위원회 :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된 충남, 경남, 인천 등등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설치는 필수적!

노동자 참여도 당연히 보장 받아야 합니다.



근데 지금 통과된다고?

이렇게 중요한 걸 얼음 만에? 발전노동자 없는 법 필요없대

국회 논의 현황

일시	회의명	비고
9.15	국회 환노위 1차 공청회	민주노총 배제해 파행
11.22	국회 환노위 2차 공청회	민주노총 참석해 진술
11.30	환노위 법안 심사 소위	쟁점안 토론
12.1 or 8	국회 본회의	표결 처리 시도

발전노동자 참여 보장 없는 졸속입법 반대!



정의로운 전환 노동자와 대화해야 합니다.



정의로운 전환, 법제와 정책 현황

여형범(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스톡홀름 환경연구소의 정의로운 전환 원칙

- | 적극적으로 탈탄소화를 고취하기
- | 해당 부문에서 탄소 잠김과 더 많은 패배자를 만들어내지 않기
- | 영향 받는 지역들을 지원하기
- | 폐쇄나 축소에 영향 받는 노동자, 가족과 더 넓은 공동체를 지원하기
- | 환경 피해를 복원하고, 관련된 비용들이 민간 부문에서 공공 부문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 | 기존의 경제적 및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 | 포괄적이고 투명한 계획 절차를 보장하기

자료: Atteridge et al, 2020

LEAVE
NO
ONE
BEHIND



기후정의연합의 정의로운 전환 원칙

- | **부엔 비비르**: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더 나은 삶을 영위함
- | **의미 있는 일**: 사람들이 역량껏 배우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의 잠재력 개발에 중점을 둠
- | **자결권**: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
- | **자원과 권력의 공평한 재분배**: 인종, 계급, 성 등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불평등을 변화시키는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자원과 권력을 공평하게 재분배해야 함
- | **재생가능한 생태 경제**: 생태회복력을 개선하고 자원의 소비를 줄이며 생물다양성과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복원하고 추출 경제를 끝내고 재생가능한 경제로 나아가는데 기여해야 함
- | **문화와 전통**: 모든 다양한 문화와 전통을 존중해야 함
- | **연대**: 모든 공동체는 상호연결되어 있음
- | **즉각적인 행동**: 우리가 필요한 세상을 지금 바로 구축하는데 나서야 함

자료: CJA, 2018, Just Transition Principles; 한빛나라 외, 2020 재인용(일부 용어 수정)

탄소중립시민회의의 참여시민단 설문조사 (2021년)

<표16> 탄소중립을 통해 기대하는 것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이상기후에 따른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	다른 생물종을 보호함으로써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것	미래세대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고 생존권을 보호하는 것	새로운 성장기회를 갖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것	기대하는 것이 없다	기타	잘 모르겠다
2차	(528)	61.9	18.9	12.7	2.1	1.9	1.8	0.7	1.9
3차	(503)	60.9	13.7	15.1	5.6	3.7	0.4	0.0	0.6
4차	(459)	51.0	10.1	19.2	4.8	14.3	0.3	0.0	0.4

[문8] 탄소중립을 통해 귀하가 가장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료: 탄소중립위원회(2021), 탄소중립시민회의의 참여시민단 1차~4차 설문조사 결과

111

<표26>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정책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업종을 바꾸거나 저탄소 기업으로 전환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	취퇴업종 노동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취퇴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정책	탄소중립사회를 대비하여 교육체계를 바꾸는 정책	기타	잘 모르겠다
2차	(528)	46.1	20.6	16.8	11.9	0.5	4.0
3차	(503)	38.6	28.5	14.2	15.6	0.2	2.8
4차	(459)	28.2	32.1	16.4	21.6	0.2	1.5

[문18]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탄소배출이 많은 업종이나 기업은 축소되거나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나 해당 기업이 입지 한 지역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약자가 배제되거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정의로운 전환이란 원칙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의 산업전환과 노동전환 정책 방향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2021.7)

정책방향: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노동자·지역 피해 최소화

산업구조 재편에 대응한 정부 정책지원 보강		
신산업 분야 혁신성장 육성·지원 전문인력 양성·공급	기존산업(고탄소·노동집약)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원활한 노동전환 지원 지역 유망·대체산업 육성	국가 경제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 공정한 전환 실현

추진전략: 노동전환의 시급성·규모에 따라 전략적 대응 + 종합적 지원체계 마련

저탄소화	○ [자동차·석탄화력발전] 노동전환 수요가 크고 단기간에 발생 ⇒ 신속 지원 → (기업) 사업재편·전환 지원 + (근로자) 직무전환, 전직·재취업 지원 + (지역) 대체산업 육성, 위기지역 신속 지정 ○ [철강·정유·시멘트 등] 탄소중립 영향 가시화 / 노동전환 수요 증장기적 발생 → 산업·지역별 일자리 모니터링 + 구조조정한 가속화로 일자리 감소 전망시 노동전환 지원체계 가동
-------------	---

디지털화	○ (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고용친화적 디지털화 지원 ○ (근로자) 디지털 직무역량 강화, 평생직업능력 향상 지원, 고용안전망 강화
-------------	--

「체계적 지원 기반 마련」
 * 중앙단위 거버넌스 및 지역단위 전달체계 구축 · 법률 제정 · 사회적 대화

	AS-IS : 사후적·개별적 대응	TO-BE : 선제적·종합적 대응
기업	사업전환 정보 및 인센티브 부족	사전적 사업전환 수요발굴 → 전략적 컨설팅 + 인센티브 강화
근로자	준비없는 실직, 계연이 고용불안 갈당	직무전환·재취직·사전적 이·전직 준비, 국가·기업·근로자가 공동부담·원화
지역	사후적으로 고용·산업 위기 대응	선제적 지역 대체산업 육성 지원
거버넌스 전달체계	법정부 종합적 지원체계 부재, 사업전환·노동전환 분절적 지원	(중앙) 거버넌스 구축 → 범부처 협업 강화, (지역) 사업전환·노동전환 연계 전달체계 구축
법·제도	법률·예산·인프라 등 미흡	법·제도 정비 / 사회적 대화 활성화

자료: 관계부처합동(2021)

탄소중립산업대전환비전과 전략(2021.12)

비전	저탄소 경제를 선도하는 세계 4대 산업강국 (제조업 르네상스 2.0)		
	구분	18년	50년(Net-zero)
목표	① 재생에너지 전원 비중	3.6%	70.8% (약 20배 ↑)
	② 청정수소 보급률	0%	60%
	③ 친환경 고부가 품목 비중	16.5%	84.1% (약 5배 ↑)
	④ 제조업 탄소집약도	49.6톤CO ₂ eq/실업원	6.8톤CO ₂ eq/실업원 (86% ↓)
	⑤ 대한민국 수출 순위	6위(20년 7위)	4강 안착

추진 방향

- 탄소중립에 따른 글로벌 산업판도 대전환은 우리가 선도자로 도약할 기회
⇒ 한 발 더 빠른 변화로 우리 산업의 새로운 경쟁력과 미래 먹거리 창출
- 기업 혼자만의 힘으로는 견뎌 수 없는 폭증의 계곡과 대원의 바다
⇒ 정부의 전폭 지원으로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함께 극복
- 탄소중립의 목표는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혁신
⇒ 중소기업·전환산업지역 등의 소외없이 함께 도약하는 정의로운 전환 실현

5대 전략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산업구조 저탄소 전환
◇ 50년 석탄발전 중단 실현 ◇ 재생 70% 목표 → 인어기역신 등 ◇ 환경규제 확대 등 전력시장 개편 ◇ 인건 94조원 탄소중립 투자 추진	◇ 산업R&D 탄소중립 중심 재편 ◇ 세제 + 35조 정책금융 등 전폭지원 ◇ 대형프로젝트 투자 인센티브 검토 ◇ 탄소중립 규제역신 TF 운영
탄소중립 기업 신산업 육성	함께 도약하는 공정한 전환
◇ 3대 분야 등 new성장동력과 추진 - 친환경 인프라 : 수소모빌리티·재생에너지 등 - 저탄소수부장 : 바이오·배터리·반도체 등 - 그린엔지니어링 : 플랜트·CCUS·신서비스 등	◇ (중소) 공정·경영혁신 범부처 지원 ◇ (전환) 에너지전환지원법 제정 등 ◇ (지역) 정의로운 전환 특구 신설, 탄소중립 상생영양지원 등
탄소중립 전환 거버넌스 확립	
◇ '탄소중립 산업전환 특별법' 제정 ◇ 유엔 정책보안 체계(UNEP) 구축	

자료: 관계부처합동(2021)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자료: 국무조정실, 보도자료(2022.3.22)

참고.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구분	내용
관할부처	•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지정근거	•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
지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급격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고용환경이 크게 변화되었거나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②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거나 변화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 ③ 그 밖에 위원회가 특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세부적으로 ① 탄소중립 정책으로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산업이 있는 곳, ② 그 산업이 지역 내 주요 산업인 곳, ③ 그 결과 고용 소득 기업경영 악화 또는 악화가 예상되는 곳 • 위기지역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위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탄소중립에 따른 피해가 있을 경우 지정이 가능, 시군구 단위 또는 복수의 시군구 특구도 가능 •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이 모두 가능할 경우 정의로운전환 특구를 우선 적용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 및 고용위기지역 지원 수단을 포함하며 기후대응기금,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등을 활용하여 지역을 보다 두텁게 지원 • 실업 예방 및 재취업 촉진, 탄소중립 전환, 기업 경영안정, 신산업 육성 및 투자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대한 지원 사업
특징	•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 지역은 위기의 원인을 특정하지 않고 있으나 정의로운 전환 특구는 위기의 원인을 탄소중립 정책에

자료: 고재경(2022)

참고.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관련 정책_산업/고용위기지역 지원 제도

구분	관할부처	지정근거	지정지역 현황	지정기간	대상업종	지원대상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산업통상자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제10조 •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시행령 제7조 • 지역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군산,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영암·목포·해남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자동차, 조선	고용위기지역 근로자·실직자(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포함)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조선업, 관광·공연업, 항공기취급업, 영화업 등	고용위기 지정 산업에 있는 사업주, 노동자(퇴직자 포함), 구직자 등
고용위기지역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 •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군산, 고성, 통영,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영암	최대 4년까지 연장 가능	자동차, 조선	노동자(퇴직자 포함), 구직자 등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	전북, 경남, 경북, 충북, 인천, 울산, 충남, 광주, 부산, 경기	2~5년 범위 내	-	컨소시엄(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 경제·산업정책과 연계한 중장기 일자리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고용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산업 클러스터 육성, 신산업 유치 등 지역 산업·경제정책과 연계하여 일자리사업 지원 • 사업미비, 요건 미충족, 예산액 부족 등으로 기존 중앙부처 일자리사업의 지원이 불충분한 사항을 패키지로 지원 						

참고.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관련 정책_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지원사업

2020년 선정

2021년 선정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5개 선정지역별 주요 추진방향

유망 신산업 육성을 통한 고용위기 극복

전북·익산·김제·완주 기동차	농식품산업 농식품산업패키지 지원 -농업기계, 제조·고도화 사업 지원 -농업 및 농촌 지원 -농산물·ICT 융합형 인력양성 등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수소전기차 등 -신산업 기업유치 및 성장에 지원 -전문 인력양성 -기술 개발, 교육육성	총사업액 136억
경남·창원 기동차·수소차	미래 자동차, 방위·항공산업 -기술혁신 사업 유망 지역 연구개발 지원 -인력양성 -군무관련 기업 지원 등	의생명산업 -원천 기술개발 지원 -기술개발, 제조·고도화 지원	총사업액 107.5억
경북·구미·김천·철곡 전자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사업화 및 실증지원(자율주행차, 스마트 모빌리티) 지원 -스마트 모빌리티 개발사업 지원		총사업액 97.5억
충북·청주·진천·음성 스마트 IT 산업	ICT 융합, 신에너지, 신교통항공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프로젝트 지원 -교육훈련, 취업연계	유기농·식품, 첨단부리산업 -사업화/시범 사업 등 및 공동출발사업 -취업연계 지원 등 지원	총사업액 65억
기존 위기산업 고도화를 통한 고용창출			
인천·부평·남동·서구 부리산업	인천 부리산업 고용창출 선순환 구조 확립 -부리기업 고도 운영 및 기술혁신 산업 경쟁력 강화 -신규 일자리 창출 지원 -훈련을 통한 구직근로자 역량 강화 등		총사업액 76.5억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4개 선정지역별 주요 추진방향

울산·북구·울주 자동차	내연기관 부품산업 -기술 지원, 사업화, 판로개척 지원	맞춤형 고용서비스 -위기산업 퇴직자 관측 지원	미래신산업 맞춤형 지원 -수소차, 전기, 자율주행차 등 인력양성	총사업액 82.5억
충남·보령·아산·서산·당진 석탄화학발전-자동차	위기산업 퇴직자 맞춤형 -석탄화학발전 퇴직자 취업지원, 실력강화 지원	맞춤형 인력 양성 지원 -핵심공역별전단지, 전문강사, 에너지, 모빌리티	신환경 산업 전환 -기술 지원, 판로개척, 컨설팅 지원 등	총사업액 81.9억
광주·북구·광산 가전-자동차	경기산업 전환 및 육성 -가전산업 제품개발 고도화, 기술 전문가 육성	위기산업 근로자 지원 -심리-취업상담 교육훈련, 취업연계 지원	신환경 자동차 산업 대응 -전문인력 양성, 생산기술 고도화 및 기술지원 등	총사업액 88.5억
부산·사상·사하·김서 기계부품(자동차·조선)	안정화 지원 -부품산업 고도화, 공명혁신 등	전환경 부흥기업 전환 -전환을 위한 기술, 사업화 지원	위기업을 이전적 지원 -기술 교육지원을 통한 수요맞춤형 취업 지원	총사업액 81.3억

참고. 정의로운 전환 특구 관련 정책_산업/고용위기지역 지원 제도

[그림 3-6]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고용위기지역,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선정지역 현황



정의로운 전환 관련 거버넌스 현황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역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탄소중립 관련 법적으로 위임된 (정의로운 전환)정책 심의·의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노사민정 사회적 대화 기구, 노사민정 협력이 필요한 사항 심의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 자동차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	산업계 및 지역 인적자원개발
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		사업전환 및 노동전환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중앙정부 범부처 협의체
탄소중립산업전환 추진위원회		업종·부문별 탄소중립 전략 논의 및 이행 점검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

자료: 고재경(2022)

정의로운 전환 관련 지원체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역할
정의로운 전환 자원센터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정의로운 전환 특구)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영향 실태조사, 산업 및 노동전환, 취약지역 및 계층 지원 등 정의로운 전환 지원
노동전환분석센터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산업별 직무분 석 및 인력수급 전망, 지역·산업 모니터 링, 이·전직 프로그램 개발 지원
	구조혁신지원센터	중소기업의 사업·노동·디지털 전환 수요 발굴 및 활용한 진단·컨설팅, 유관 지원사업 원스톱지원
	권역별 미래차전환 종합지원 플랫폼	정부·완성차사와 미래전략 공유, 부 품기업의 전략 수립, 기술개발, 자금 조달, 사업화 등 지역 자동차 부품기 업의 미래차 전환 지원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정의로운 전환 부분 세부 과제

관리 번호	과제명	주관부처 (협조부처)
4-1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	
	① 산업전환고용안정법 제정 지원	고용부
	② 산업전환에 대응한 지역산업별 고용영향 분석	고용부
4-2	산업·기업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 지원	환경부, 중기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
	① 산업 변화 전망과 연계한 종합지원 체계 구축	산업부, 중기부, 환경부, 농식품부, 기상청
	② 중소기업 전환 촉진을 위한 사업전환 지원	중기부
4-3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과정의 고용안정 지원	기재부, 고용부, 환경부
	① 산업일자리 전환에 대응한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제공	해수부
	② 위기업종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	산업부(소방청), 중기부
4-4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의로운 전환 추진	
	① 지역산업 위기 대응 강화	고용부, 산업부
	② 지역별 맞춤형 산업구조 전환 지원	고용부, 산업부
4-5	기타 선제적 지원으로 정의로운 전환 실현	
	① 농업 농촌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	농식품부
	② 어촌어업인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	해수부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정책 추진 현황

- 노후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와 친환경에너지(발전소) 전환 타당성 연구(2차년도):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전략과 과제 (2021.2) [연구수행: 충남연구원]
-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2021.2.22)
- 충청남도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선정 (2021~)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
- 태안군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민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022.2.25)
- 충청남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및 훈련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2022.4.11)
- 충청남도 노동전환 특별위원회 구성 (2022.7.22) [충남노사민정협의회 운영]
-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 제정(2022.12.30)
-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추진전략 수립계획 (중간보고 진행) [연구수행: 충남연구원]
-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발의 준비 중)
- 석탄화력발전 폐쇄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국내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 대한 총평(단상)

- | 정의로운 전환 총괄 책임 단위 부재 (누구와 얘기해야 하나?)
- | 정의로운 전환의 목표 설정 부재 (영향 받는 지역사회와 노동자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
- | 기업 지원과 육성을 통한 고용 및 지역경제 쇠퇴 문제 해결 추진 (녹색성장?)
- | 정부(중앙/지방)의 책임과 역할 설정 미흡 (최소한의 지원 역할에 국한)
- | 기존 산업위기/고용위기 및 지방소멸위기 대응 대책 적용 (어떤 성과와 한계?)
- | 특정 위기산업에 대한 우선적인 관심 (전체 사회 전환에 대한 고민 부재)
- | 노동자, 지역사회 당사자의 참여 및 협력적 거버넌스 미흡
- |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미래상 및 전망 부재 (정의로운 전환의 목표 설정 부재와 연결)
- | 지역사회의 전환 (또는 혁신) 역량에 대한 무관심

정의로운 전환 충남도민회의(준) 활동 방향

이진숙(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플 활동가)

| 정의로운 전환 충남도민회의의 활동계획과 방향 |

- 1 사업 추진 배경
- 2 활동 경과와 현황
- 3 계획과 방향
- 4 제안



연대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충남도민선언

이것이 정의다.

1. 충청남도농업기술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긴급히 대응하며,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피해를 본 주민의 회복을 지원하는 기후정의 안전망을 갖춰야 한다. 주민 누구나 보편적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물과 식량, 에너지, 보건, 주거, 교통, 환경, 복지를 포함한 종합 계획을 주민 참여를 통해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2. 충청남도는 탄소를 뿜어내는 서산민항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영리 목적의 시기업이 아닌 공공적인 신재생에너지를 주민 참여를 통해 개발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3. 충청남도는 탄소중립위원회는 물론, 정의로운전환위원회에 폐쇄되는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를 비롯하여 농민과 지역 주민, 당사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4. 충청남도는 깨끗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는 보편적 인권이라는 유엔 총회 결의에 따라 주민 환경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5. 충청남도는 '농민 기본소득' 등 기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농민의 보편적 소득보장 정책을 도입하고, 여성 농민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유엔 농민권리선언의 기준을 이행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행동하고 존엄한 삶의 권리를 지키려 연대한다. 자연과 사람을 착취하는 추출경제에서 지속가능한 재생적 경제로 전환하며, 공공적이고 민주적이며 생태적인 에너지 체계로 전환하며, 그 누구도 홀로 남겨두지 않는, 모두의 안전과 존엄이 보장되는 정의로운 공동체를 위해 연대한다. 생태계와 환경을 지키는 것, 기후위기에 맞서는 것, 우리가 서로의 존엄을 지키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 우리의 연대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공동체를 열자.

세계인권선언 74주년. 2022. 12. 10.

인권재단 사람은

"누구든지 인권을 지키기 위해 저항하고 연대해야 한다."

- 2008 다시쓰는 인권선언 제2조

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를 경험한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권력에 맞서며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시민이 나서서 지키지 않으면, 인권은 언제든 후퇴할 수 있음을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권을 지키기 위해 저항하고 연대하는 사람들의 버팀목이 되고자 합니다. 풀뿌리 모금을 통해 국내에서 꼭 필요한 인권 활동을 지원하고, 이러한 활동이 지속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소중한 목소리를 모아, 인권의 가치가 구석구석 스며드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인권재단 사람 2004-2021](#)

지원단체

	단체명	사업명
1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지역 성소수자 가시화 사업
2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틀	기후위기, 누구도 홀로 남겨두지 않는 인권사회를 위하여 II - 연대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충남도민 2023 선언

신청 사업 개요	사업명	기후위기, 누구도 홀로 남겨두지 않는 인권사회를 위하여 II - '연대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충남도민 2023 선언'	
	사업기간	2023년 3월 1일 ~ 2023년 11월 30일 (총 9 개월)	
	사업내용 요약	충남은 송전탑과 오염시설 등으로 피해를 겪는 주민들이 많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추진되어 정의로운 전환이 중요한 과제임. '연대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충남도민 선언' 운동을 통해 주민과 당사자가 인권에 기반한 문제해결의 주체로 역량을 키우며 연대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2022년 사업 평가를 바탕으로 시민 교육, 간담회, 선언 동참 캠페인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사업비	지원금	15,000,000원(82.5%)
	총 사업비 (신청금액+자부담+기타)		18,170,000원(100%)

1 사업 추진 배경

(인권재단 사람에 제출한) 사업의 목표

- 지역 주민(노동자, 농민, 청소년 등)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인권옹호자로, '연대와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는 주체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첫째, '기후위기와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시민(활동가) 교육을 진행하고, 둘째, 당사자와 주민이 참여하는 공론장을 간담회, 집담회, 토론회 등으로 개최하며, 셋째, '연대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충남도민 2023 선언' 캠페인을 통해 충남도민 2023명의 선언을 모아, 충남도가 인권에 기반한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도록 건인함.
- 사업에 대한 홍보와 소통, 다양한 시민의 선언 참여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함.

'정의로운 전환 충남' 1차 추진모임

- 일시 및 장소 : 3월 27일 14시. 내포
- 참여 : 이진숙, 여형범
- 내용
 - ① '빠띠'가 제안한 것들 중에서 '믹스'를 활용하면 좋겠다.
 - ② 활동 목적은 충남의 정의로운 전환을 추구하는 '사회적 힘을 만드는 것' 이다. 충남의 정의로운 전환이란, 가. 석탄발전 폐쇄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나. 지역 공동체를 지원하고, 발전노동자의 일자리를 보장하기
 - ③ 이를 위해
 - 가. 석탄발전 폐쇄, 정의로운 전환의 방향에 대한 다양한 영역의 공감대를 확보하기
 - 나. 충남도와 정부의 추진계획에 대한 평가
 - 다. 우리의 (대정부)요구를 만들고 설득력 있는 방향을 제시하며 가시화하기
 - 라. 시민참여 활동
 - 마. 디지털 플랫폼 운영하기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 - '빠띠'의 믹스 첫 화면>

<플랫폼 예시 : '빠띠'믹스에 있는 그룹(도봉구생태전환실천연구소) 페이지 첫 화면>

2 활동 경과와 현황

'정의로운 전환 충남' 2차 추진모임

- 일시 및 장소 : 4월 19일 14시. 내포
- 참여 : 이진숙, 정인식(부들) 김예은(인연), 여형범(충남연구원), 김민우(발전노조 보령), 이용도(한산발전본부 태안지부, 송상표(금화psc지부), 김영훈(kps비정규직지회), 이태성(연대회의)
- 내용
 - ① 온라인 플랫폼 워크샵(빠띠와 함께)
 - ② 연대활동의 목적 토의
 - 가. 석탄발전소 폐쇄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 나. 지역 공동체를 지원하고, 발전노동자의 일자리를 보장하기
 - 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도민의 요구와 역량 모으기
 - ③ 연대활동의 명칭 결정 : 정의로운 전환 충남도민회의(준)
 - ④ 2023 주요 사업 결정
 - 가. 협력과 역할 분담을 통해 온라인플랫폼을 구성하고 운영한다.
 - 나. 정의로운전환을 위한 도민선언을 만든다. (교육, 공론장, 캠페인)
 - 다. 10월 충남도 탈석탄컨퍼런스 즈음하여 도민회의를 발족하고 선언을 선포한다.

⑤ 이후 계획

- 가. 온라인 플랫폼 - 디자인, 콘텐츠 준비
- 나. 도민회의(준) 활동가 워크샵
 - 1. 목적 : 도민회의(준)의 활동 목표와 선언 핵심 내용 토론 + 지역 시민사회 참여
 - 2. 일정 : 5월 4주차
 - 3. 프로그램 - 414 파업 이후 정의로운 전환의 요구와 방향
 - 도민회의 활동 목표와 계획 발제
 - 도민회의 목표와 선언 내용에 대한 참여 단위 토론

'정의로운 전환 충남도민회의' 3차 추진모임

- 일시 및 장소 : 5월 3일. 16시. 온라인.
- 참여 : 이진숙, 정인식(부들), 김민우(발전노조 보령), 김영훈(kps비정규직지회), 최재순(발전노조) 여형범(충남연구원)
- 내용
 - ① 믹스온 요청 사항 협의
 - 플랫폼 이름, 서브도메인명, 색상, 로고, 지도에 표시할 주소, 운영원칙 등
 - ② 온라인 플랫폼(믹스온) 카테고리 구성
 - 가. 공지(또는 새소식)
 - 나. 참여(선언문, 캠페인즈와 연동하고, 자유로운 제안이 가능하도록)
 - 다. 모임(집담회, 공론장, 운영진 모임 등)
 - 라. 자료(카드뉴스, 영상, 자료집 등)
 - 마. 소개

③ 워크샵 준비

가. 목적 : 도민회의(준) 활동목표와 방향에 대한 토론 + 지역사회 참여

나. 일정 : 5월 마지막 주(예정)

다. 장소 : 내포(부들 섭외)

라. 프로그램 |

1. 414 파업, 정의로운 전환 핵심 요구 발제(기후정의동맹)

2. 발전노동자

3. 도민회의(준) 활동 목표와 계획

4. 도민선언 초안과 토론(초안 협의 모임은 5월 10일. 온라인)

마. 홍보 : 민주노총, 농민회, 환경단체, 진보정당 등

‘정의로운 전환 충남도민회의’ 도민선언 작성 1차 모임

- 일시 및 장소 : 5월 10일. 14시. 온라인.

- 참여 : 이진숙, 여형범(충남연구원)

- 내용

① 선언의 용도

- (지방)정부와 의회에 우리의 의지와 요구를 전달
- 시민의 지지와 참여를 모으는 활동
- 도민회의의 역량 강화

② 선언의 내용

- 가. 왜 선언을 하는가? (정의로운 전환의 의미, 현재 전환 추진 현황과 예상)
- 나. 우리의 주장 (에너지, 일자리, 지역지원, (지방)정부의 역할(재정계획 포함))
- 다. 우리의 계획 (민의 참여로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할 것)
- 라. 덧붙여 (개인, 그룹, 공동체의 선언 이어가기)

③ 선언 작성의 고민

가. 에너지, 일자리, 지역지원 계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야
(일자리 관련 이태성님 발제를 바탕으로 구체화)

나.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전환 관련 법제를 살펴보아야 - 워크샵 발표에 추가

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법, 사회적 대화, 위원회 등을 요구하고 쟁취하는 것은 중요함.
아울러, 정의로운 전환이 어떤 것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더 많은 사회적 지지와 역량을
갖추기 위해 전환 중이거나 전환 이후 지역 사회를 그려보는 것도 필요함.

- 충고용 보장은 어떻게 이뤄질까? - 지역사회 경제는 어떻게?
- 주민들의 삶의 질은? 일자리의 질은? - 복지와 재난에 대비한 사회적 안전망은?
(이를 위해 공론장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관심있는 분들과 세미나를 추진하면 좋겠음)

라. 워크샵에 토론자를 섭외하여 풍성한 논의가 될 수 있으면 좋겠음.

3 계획과 방향

① 디지털 플랫폼

운영원칙

공론장과 참여의 원칙 마련하기

컨텐츠

소식, 자료, 선언문, 참여, 연구

운영진

역할 나누고 점검하기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주체 형성과 역량 강화

② 공론장

노동

발전노동자, 산업전환 노동자 등

발전소 지역

소상공인 등 각계 각층

충남도민

농민, 사회적약자와 소수자 등

소통, 공감, 협력과 연대의 네트워킹

③ 선언과 캠페인

선언 초안 모임

개인, 그룹, 공동체의 선언

지역 곳곳에서 온/오프 캠페인

2023. 10. 도민회의 발족과 선언 선포

3 계획과 방향



4 제안

죽은 지구에 일자리는 없다.

pexels.com/@markussptske



일자리 만이 아니라 생명과 삶이 사라질 위기.
정의로운 전환은 공존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소통과 연대로 현실이 되게 하자.

정의로운 전환 충남도민회의(준) 참여

개인과 집단의 자유로운 참여를 바탕으로 운영진 구성

공모지원금 바탕으로 가능한만큼 사업비 확보

교육 / 정책 / 선언 / 캠페인 / 공론장 / 협력 / 디지털